

현안업무보고

2015. 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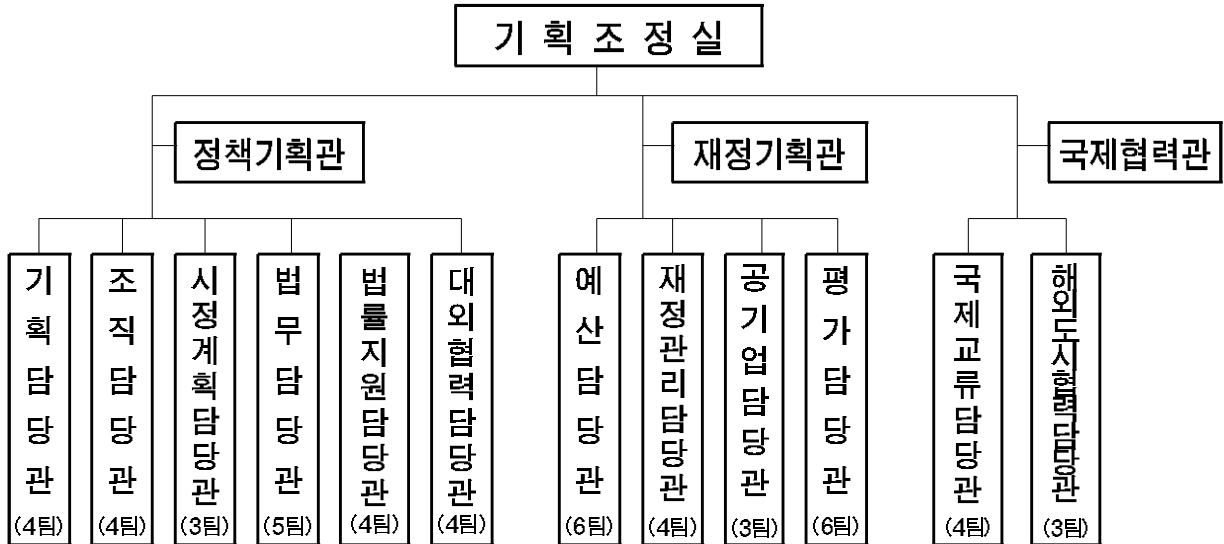
기획조정실

목 차

I .	일 반 현 황	1
II .	정 책 목 표	7
III .	시정 주요 현안	9
IV .	기획조정실 현안사항	25

I. 일반 현황

조 직 1실, 3관, 12담당관, 50팀, 1직속기관 · 1출연기관



- 직속기관 : 시립대학교(7대학 8대학원 6처)
- 출연기관 : 서울연구원(1본부 5연구실 5센터)

인 력 280/270명(정원/현원)

(15. 6. 22. 현재)

구 분	합 계	일반직	임기제	별정직	관리운영직
계	280 / 270	235 / 223	34 / 33	1 / 1	10 / 13
기 획 담 당 관	28 / 26	25 / 25			3 / 1
조 직 담 당 관	30 / 27	28 / 24	1 / 1		1 / 2
시 정 계 획 담 당 관	11 / 11	9 / 8	2 / 2		/ 1
법 무 담 당 관	23 / 23	21 / 20	1 / 1		1 / 2
법 률 지 원 담 당 관	24 / 23	10 / 9	14 / 13		/ 1
대 외 협 력 담 당 관	20 / 21	17 / 17	3 / 3		/ 1
예 산 담 당 관	36 / 33	34 / 32			2 / 1
재 정 관 리 담 당 관	19 / 19	18 / 17	1 / 1		/ 1
공 기 업 담 당 관	15 / 14	14 / 13	1 / 1		
평 가 담 당 관	36 / 34	33 / 32	1 / 1		2 / 1
국 제 교 류 담 당 관	24 / 25	15 / 15	7 / 7	1 / 1	1 / 2
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	14 / 14	11 / 11	3 / 3		

주요기능

구 분	담 당 업 무
기 획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업무계획 수립, 시정현안사항 기획·조정 ○ 국회·시의회 관련 업무 등
조 직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, 민간위탁 업무, ○ 사무위임전결, 지방분권 업무 및 직무발명 등
시정계획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수립 및 관리, 공약 총괄관리 ○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,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
법 무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법규 제·개정, 규제개혁 ○ 행정심판, 소청심사 운영
법률지원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송총괄, 주요 시책사업 법률자문, 계약(협약) 심사 ○ 서울시공익변호사단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
대외협력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관련 업무 총괄 ○ 전국시도지사협의회,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등
예 산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편성 및 운용·관리, 중기재정계획 수립 ○ 국고보조금 관리, 예산성과금 및 기금운용·관리 업무 총괄 등
재정관리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정투자심사, 市 민자사업 관리 ○ 시·투자출연기관 통합재정관리, 주민참여예산제 등
공 기 업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·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○ 투자·출연기관 관리 및 경영평가, 부채관리 등
평 가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 주요사업·시책 평가 ○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등
국제교류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협력 계획 수립 ○ 자매우호도시 등 외국도시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·지원 총괄 ○ 국제기구 유치·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

예산 총 규모 : 1조 6,754억원

○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, 최종예산기준)

구 분	2014년 (사업수)	2015년 (사업수)	증 감
합 계	2,294,511 (69)	1,675,435 (72)	△619,076
일반회계	707,695 (47)	435,308 (53)	△272,387
도시개발특별회계	447,683 (1)	182,919 (1)	△264,764
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	2,070 (-)	177,670 (-)	175,600
기금	1,137,063 (21)	879,538 (18)	△257,525

○ 일반회계 : 총 4,353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년 (사업수)	2015년 (사업수)	증 감
합 계	707,695 (47)	435,308 (53)	△272,387
기획담당관	1,062 (3)	1,013 (3)	△49
조직담당관	17,891 (8)	20,982 (9)	3,091
시정계획담당관	- (-)	14 (-)	14
법무담당관	4,206 (3)	386 (3)	△3,820
법률지원담당관	- (2)	3,956 (2)	3,956
대외협력담당관	899 (3)	4,562 (5)	3,663
예산담당관	248,091 (5)	378,210 (5)	130,119
재정관리담당관	430,426 (4)	15,187 (5)	△415,239
공기업담당과	- (3)	2,120 (4)	2,120
평가담당관	2,859 (6)	1,733 (6)	△1,126
국제교류담당관	2,261 (6)	2,238 (6)	△23
해외도시협력담당관	- (4)	4,907 (5)	4,907

○ 도시개발특별회계 : 총 1,829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년 (사업수)	2015년 (사업수)	증 감
예산담당관	447,683 (1)	182,919 (1)	△264,764

○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: 총 1,777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년 (사업수)	2015년 (사업수)	증 감
재정관리담당관	2,070 (-)	177,670 (-)	175,600

○ 기금 : 총 8,795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년 (사업수)	2015년 (사업수)	증 감
합 계	1,137,063 (21)	879,538 (18)	△257,525
재정투융자기금	994,389 (-)	842,405 (-)	△151,984
감채기금	124,731 (-)	17,290 (-)	△107,441
남북교류협력기금	10,772 (1)	11,249 (1)	477
대외협력기금	7,171 (20)	8,594 (17)	1,423

※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

주요 예산사업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, 기준일 : 6.19)

연번	부서명	사업명	최종예산	원인행위	집행액	집행률
1	기획담당관	시정계획수립조정	542,085	313,743	312,265	57.6%
2	조직담당관	시정시책연구용역	1,706,600	974,754	466,170	18.8%
3		직무발명보상제도운영	160,500	46,871	19,971	12.4%
4		서울연구원출연	18,467,865	9,233,928	9,233,928	50.0%
5		책임운영기관제도운영	103,550	47,250	47,250	45.6%
6		민간위탁제도운영	239,800	88,676	88,676	37.0%
7		실질적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개최	100,000	49,000	49,000	49.0%
8		법무담당관	국가입법관리시스템 및 법무행정서비스 운영	153,484	118,894	47,775
9	행정심판위원회운영		134,100	55,590	55,590	41.45%
10	법률지원담당관	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	249,210	93,556	93,556	37.54%
11		민사, 행정소송등수행	3,690,500	1,371,699	1,362,822	36.93%
12	대외협력담당관	지방자치단체협의체등지원	593,000	246,669	246,669	41.6%
13		대국회협력업무강화	100,000	31,840	31,840	31.8%
14		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	156,000	23,156	23,156	14.8%
15		중랑천녹색문화벨트조성	661,000	661,000	661,000	100.0%
16	예산담당관	성과주의예산운영(재정정보)	460,548	323,510	166,742	36.2%
17		예산절약성과금제운영	300,000	169,500	169,500	56.5%

연번	부서명	사업명	최종예산	원인행위	집행액	집행률
18	예산담당관	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	172,000,000	51,600,000	51,600,000	30.0%
19	재정관리담당관	주민참여예산제운영	438,920	181,500	107,450	24.5%
20	공기업담당관	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등수행	367,930	317,740	142,270	38.7%
21		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분담금	122,000	90,460	90,460	74.1%
22		자치구공단경영평가	125,000	124,127	0	0.0%
23		시정주요사업컨설팅	1,500,000	1,440,600	0	0.0%
24	평가담당관	시정주요사업성과관리강화	105,987	43,671	21,783	20.6%
25		행정서비스시민평가	498,300	4,736	4,736	1.0%
26		기관별성과평가	965,000	477,258	477,258	49.5%
27	국제교류담당관	자매도시교류	409,630	161,677	161,677	39.47%
28		지구촌나눔한마당	497,850	479,634	336,689	67.63%
29		국내개최국제행사(회의)지원	173,500	39,144	39,144	22.6%
30		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참여분담금	500,000	464,049	464,049	92.81%
31		자매·우호협정체결기념행사	532,300	213,049	213,049	40.02%
32	해외도시협력 담당관	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교류 활성화	1,168,420	189,893	189,893	16.25%
33		국제회의(기구) 참가확대및유치	886,052	216,602	174,902	19.74%
34		시티넷사무국운영지원	400,000	150,000	150,000	37.50%
35		서울글로벌센터빌딩위수탁	2,117,199	1,153,202	1,153,202	54.47%

II. 정책 목표

사람이 중심인 서울, 시민이 행복한 서울

시정성과 창출 및 체계적 정책조정

재정운영의
건전성
실현

투자
출연기관
경영혁신

시정 전반의
효율성
제고

법률지원
서비스
내실화

세계도시
서울의
위상 강화

Ⅲ. 시정 주요 현안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① |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추진 (기획조정실) | 11 |
| ② | 서울역 7017 프로젝트 (도시안전본부) | 21 |
| ③ | 「찾아가는洞주민센터」 성공적 추진 (행정국) | 23 |

1

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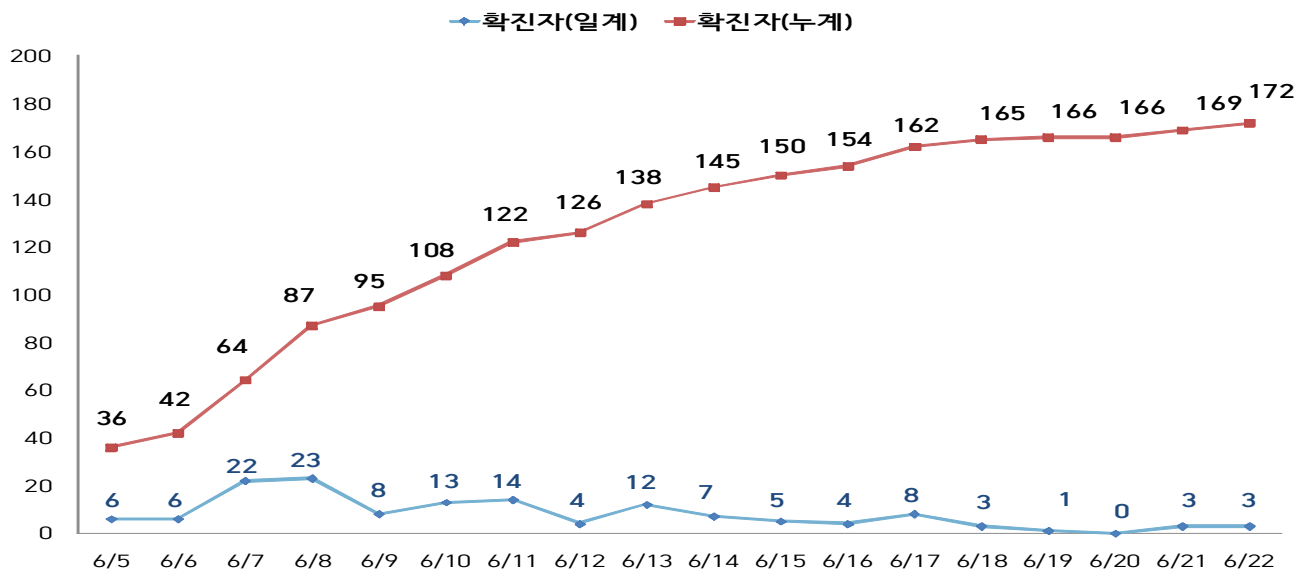
(기획조정실)

메르스 감염의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市 전체 역량을 집결하여 총력대응하고자 함

1. 서울시 메르스 대책 기본 현황 (2015.6.22(월) 기준)

메르스 증상 관련자 현황

구 분	확진환자 총계	사망자	퇴원자	치료중
전 국	172	27	50	95
서 울	48	4	9	35



※ 6.14일 이후 신규 확진환자가 10명 이하로 다소 안정화 추세, 향후 28일간 확진환자가 없으면 상황종료

시민상담 및 문의

구 분	누계 (일계)
120 상담	37,413(426)
메르스 상담콜센터	10,643(106)

밀착보호상담(모니터링) 현황

총계	외출제한(격리)		능동감시
	시 설	자 가	
2,402	6	1,158	1,23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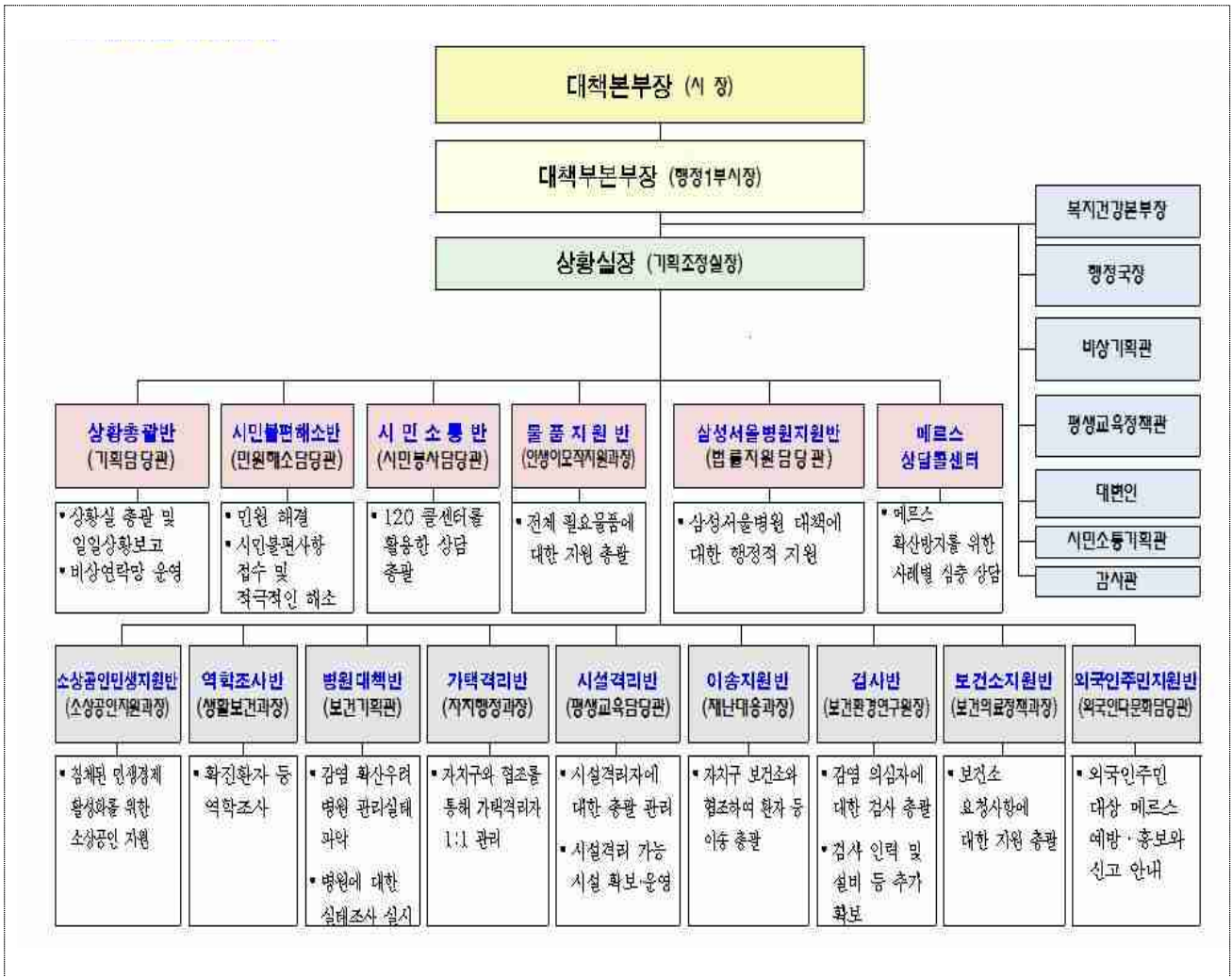
2. 메르스 관련 일자별 주요사항

일 자	주 요 내 용
5.20	1번째 확진환자 발생 '서울시 방역대책본부'(본부장 : 보건기획관) 설치
5.29	서울시 방역대책본부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격상
6.03	시장 주재 메르스 민관합동 점검회의 개최
6.04	메르스 관련 대시민 발표 서울시 방역대책본부장을 서울시장으로 격상
6.05	메르스 대책회의 정례화
6.07	메르스 관련 중앙-지방 긴급회의(세종시)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메르스 확진 권한 확보
6.08	서울시-서울시 의사회 공동성명 발표
6.10	국무총리-시도지사 간 합동회의(세종시)
6.12	20개 병원장과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
6.13	137번째 확진환자(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) 발생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 실시
6.14	「민관합동 TF 즉각대응팀」에 서울시 참여
6.15	복지부-서울시-삼성서울병원 공동대책회의 개최 삼성서울병원 '방역관리 점검·조사단' 구성 및 서울시 참여
6.19	황교안 신임총리 보라매 병원 방문

3.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민관협력 체계 강화

서울시 :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

- 병원대책, 동선조사, 외출제한 등 14개의 추진반(T/F) 설치
- 시장 주재 메르스 대책회의 매일 2회 개최



자치구 : 자체 메르스 방역 대책본부 구성·운영

- 메르스 대책본부장 격상 : (5.29) 부구청장 ⇒ (6.7) 구청장
- 외출제한(자가격리) 시민 1인 1담당제 실시(구청 및 보건소)
- 의심환자 진료·이송·검체 채취, 외출제한통지서(가택격리서) 발급 등

민관협력을 통한 메르스 대응

- '서울시의사회'와 메르스 극복 협력 공동선언 (6.8)
- 20개 병원장과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(6.12)
- 의용소방대와 협력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
 - 366명의 민간인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, 외출제한자 등의 애로사항 해결
- 자원봉사자 참여 유도로 메르스 현장 지원
 - 보건·의료 등 전문분야(28명), 생필품 지원 봉사(88명) 등

4. 외출제한 시민에 대한 일대일 맞춤서비스 제공

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, 매일 2회 밀착보호상담 실시

- 밀착보호상담(모니터링)을 위한 1인 1담당제 실시
 - 자치구 보건소·구청 인력 투입
 - 전화상담 1일 2회 이상 실시, 이탈 의심 시 가택 방문
 - 가택 임의이탈 시, 경찰과 협력하여 소재 파악 및 외출제한 조치
- 외출제한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
 - 지원대상 : 모든 외출제한·입원자(약 5,000명 추정)
 - 지원내용 : 1개월치 생계비 지급, 생필품 별도 지원(10만원 상당)

가구구성원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(원)	409,000	696,500	901,100	1,105,600	1,310,200	1,514,700

□ 동선조사 강화를 위해 10개조의 역학조사반 구성·운영

-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3명 중 92명 완료(6.22일 현재)
 -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환자에 대한 기본정보 및 역학조사 결과 입수
 - 확진환자 질문 및 경유지 탐문을 통해 모든 경유지 및 접촉자 파악
 - ⇒ 외출제한조치(격리) 또는 능동감시 실시, 방역 등 후속 조치 이행
- 확진환자의 시간별 이동동선 지도(인포그래픽) 작성 및 시민공개

5. 120 다산콜센터 인력 및 전용 상담콜센터 회선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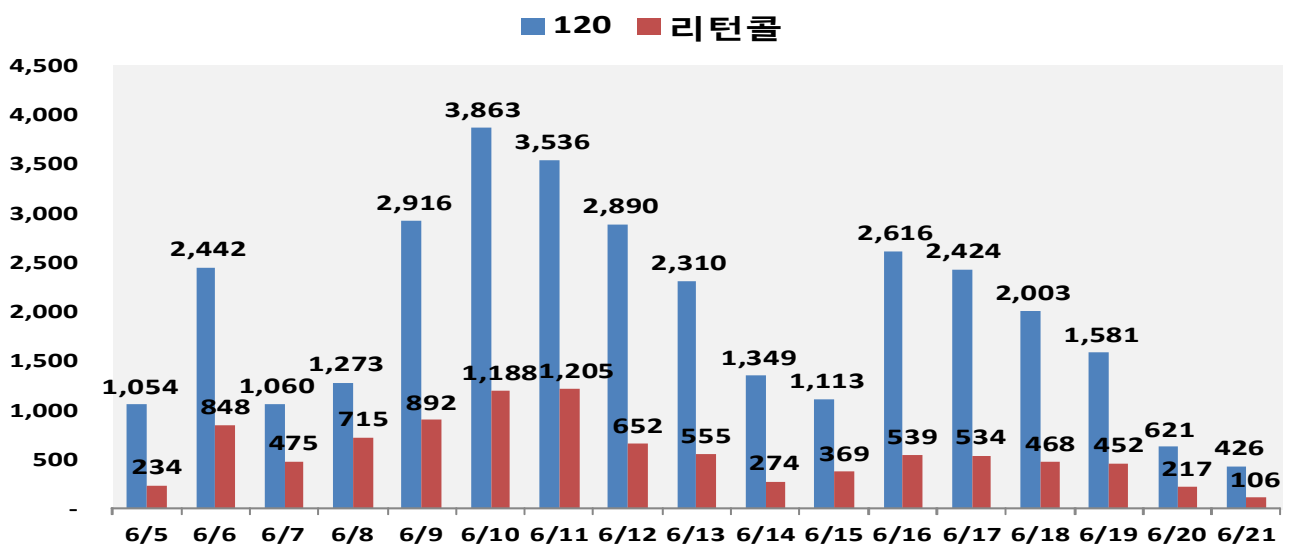
□ 「120 다산콜센터」 인력 확대 : 일평균 근무인원 349명으로 11명 증가

- 저녁·야간대(19:00~08:00) 상담인력 보강(25명→29명) : 6.4~
-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·긴급 메시지 전파 및 핫라인 안내 : 6.4

□ 「메르스 전용 상담콜센터」 확대 운영(6.8) : 6 → 30개 회선

- 기존 6개 회선에서 30개 회선(35명)으로 확대
- 메르스 전용 ARS 0번 신설, 전담 핫라인 운영(6.9~)

< 120 및 메르스 전용 상담콜센터 처리건수 추이 >



6. 메르스 검진역량 2배 확충 및 메르스 확진검사 실시

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진 권한 확보(6.7)

- 종전에는 2차 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실시하여, 오송까지의 검체 이송시간·대기시간 등으로 인해 확진까지 장시간 소요
- 지속적 확진권 이양 요구로 권한 확보 ⇒ 6.8일 17시부터 확진 검사 실시
- 권한 확보로 확진 소요 시간 평균 10시간 단축
 - ⇒ 빠른 확진 판정으로 신속한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 가능

메르스 검진역량 확충

-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진인력 확대 : 9명 → 37명
- 검진 능력 2배 확충 : 1일 35건 ⇒ 1일 70건 검사 가능
- 6.22일 현재 857건 검진(6.8일 이후 1일 평균 60건 실시) : 19명 확진

7. 서울시 주요 시설을 활용한 외출제한자 보호

외출제한자 중 시설입소 희망자를 위해 시립시설 2개소 확보

- 시설규모 : 2개소(서울시 인재개발원 등), 총 105명 수용 가능

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보호시설로 개방(6.11~)

- 6.22일 현재 6명 보호 중 (누계 14명, 확진환자 발생 없음)

8. 140개 가용구급대를 모두 활용한 24시간 이송보호체계 구축

23개 소방서 전체에 이송지원반 구축 및 주·야간 24시간 운영

- 지원반 구성 : 3담당 11명 24시간 근무, 가용 구급대 140개대
- 의심환자 이송실적 : 397건(5.29~6.22일까지)
- 사후조치 : 이송 이후, 대원·구급차량·적재장비 등 방역·소독

의용소방대를 활용한 “119안심도움전담반” 운영

- 구 성 : 의용소방대원 366명 (모니터링 8명, 방문 도우미 358명)
- 대 상 자 : 1,657명 (119구급대 이송 114명, 기타 1,543명)
- 외출제한자 애로사항 및 불편 청취 후, 민원해소 지원

9. 시민 중심의 환자 진료 체계 마련

메르스 의심자 진료 : 선별진료소(65개소)

- 32개 응급의료기관(24시간), 25개 보건소, 8개 시립병원에 선별진료소 확보
 - 23개 보건소에 음압시설(감염차단저압력시설) 신규 설치 완료(6.19)
 - 8개 시립병원 : 서울의료원, 보라매병원, 서북병원, 동부병원, 북부병원, 서남병원, 은평병원, 어린이병원

일반환자 진료 : 안심병원(33개소)

- 국민안심병원 161개소 중 서울시 소재 안심병원 33개소 지정

10. 지하철 소독 등 대중교통·공공시설 방역 확대

- 대중교통 방역강화 : 지하철, 버스, 개인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 대상
 - 지하철 : 열차 내부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, 객실·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매일 소독
 - 역사 307개, 전동차 3,715량에 대한 방역·소독 시행
 - 손소독기 337개 및 마스크 44만매 등 보급
 - 버스 : 시내버스 차량내부 방역 및 소독 강화
 - 시내버스 9개사 1,000대 차량내부 방역·소독 시행(6.6~)
 -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(6.9 오후부터), 버스내 손세정제(2개) 비치 추진
 - 개인택시 : 택시내부 방역소독 및 예방교육 확대
 - 서울개인택시(49,363대), 법인택시(225개사), 장애인콜택시(424대)
 - 버스·화물 터미널 : 1일 1회 이상 터미널 대기실 등 소독 강화
 - 버스터미널 대기실(25개소), 화물터미널(2개소) 방역·소독 강화

11.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

- 메르스 관련 행동지침 등 관련 정보 홍보·공유
 - 일상생활 규칙, 감염시 증상 및 대처요령, 메르스 관련 시 대책 포스터 제작, 지하철 역사내 게시
 - 메르스 관련 주요 정보(시민행동지침, 확진환자 주요동선 등)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, SNS·시 홈페이지 게재
 - 메르스 관련 서울시 대책회의 영상 공개, 정보 공유
- 외국어 SNS 채널을 활용한 「시민행동지침」 안내
 - 영어권(페이스북), 중국어권(웨이보, 런런왕, 시나블로그), 일어권(야후재팬블로그)

12. 긴급 재정투입 및 중소기업·병원 지원

□ 메르스 관련 긴급 재정투입 : 총 지원규모 156억원

- 물품 및 장비 지원 : 99억원(예비비 82, 특별교부세(국비) 4, 재난관리기금 13)
 - 대 상 : 복지, 문화, 교통시설 등 대시민 집객시설 107,470 개소
 - 규 모 : 437만개(손세정제, 마스크 등)
 - 방 법 : 시설별 예산지원 또는 물품 지원 및 즉시 배포
-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: 6억원(예비비)
 - 대 상 : 약 3천명(복지부 격리대상 통보자, 재개발조합 총회 참석자 등 외출제한자)
 - 규 모 : 물품(10만원 상당) 및 긴급생계지원 등 6억원
 - 지원내용 : 식품(쌀, 라면 등) 및 위생용품(마스크, 손세정제 등) 등
 - 방 법 : 자치구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 지원
- 자치구 지원 : 27억원(특별교부금)
 - 대 상 : 25개 자치구
 - 규 모 : 27억원(기본 1억원 지원 및 자치구별 발생인원 기준으로 추가지원)
 - 용 도 :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 저지를 위한 물품구입, 방역대책, 홍보 등
- 서울시 교육청 방역예산 긴급지원 : 19억원(재난관리기금)
 - 메르스 방역 관련 서울시 모든 유치원·초·중·고교 방역소독 : 4억원
 - 전 학급에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: 15억원
- 기타 : 5억원(재난관리기금)
 - 다중이용시설(노래연습장, PC방) 긴급방역 : 3억원
 - 메르스 선별 진료실 설치 : 1억원
 - 시민행동지침 등 긴급 대시민 정보제공(온오프라인) : 1억원

□ **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보증 자금대출 : 2,000억원**

- 대 상 : 개업 후 6개월 경과 서울 소재 **소기업·중소상공인**
- 규 모 : 2,000억원(시중은행협력자금)
- 내 용 : 기업당 **최대 5천만원** 특별보증 및 대출지원
 - 이차지원 : 이차보전 연1.5%, 연 이자 최저 1.9%
 - 보증료 인하 : 직접 피해업체(연0.5%), 간접 피해업체(연0.8%)
 - ※ 직접피해업종 : 운수업, 음식업, 숙박업, 여행사, 전시·행사업 등
 - ※ 간접피해업종 : 도매 및 소매업, 교육 서비스업, 제조업 등

□ **메르스 피해병원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유예**

- 대 상 : 확진환자, 외출제한자, 휴·폐업 병원
- 내 용 : 재해 등에 따른 지방세 납부 또는 신고 기한연장,
고지유예·분할고지·징수유예 (6개월~1년)
 - ▶ 자동차세·지방소득세(6월), 주택·건물분 재산세(7월)에 대해 즉시 기한 연장, 징수유예 조치 완료(시·자치구)
 - ▶ 주민세(8월)와 주택·토지분 재산세(9월)에 대해서도 납부 고지전 사전 안내 실시

서울역 일대의 낙후된 주거환경과 철도로 인한 공간적 단절을 극복하고
통합적 도시재생을 통해 정체된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 도모

□ 추진방향

-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길로 전환하여 주변지역 재생의 촉매로 활용
- 중림동, 청파동, 공덕동 등 서울역 주변지역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
- 한양도성, 남산, 명동, 남대문시장 등 관광명소를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

□ 추진내용

- 걷는 도시 활성화를 위한 보행길로의 전환 추진
 -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비니마스의 '서울수목원'을 당선작으로 선정 : '15. 5월
 - 기본·실시설계 시행 : '15. 6~12월
- 서울역 위상회복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북부 역세권 개발 조기 추진
 - 서울시와 코레일간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의 장 마련 : '15. 5월~
- 침체된 남대문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활성화 전략 추진
 - 중소기업청의 『글로벌 명품시장』 으로 기선정('15.4), '18년까지 50억 지원
 - 남대문시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 : '15. 4~'16. 6월
- 서울역 주변 종합교통개선대책 수립·시행
 - 서울역 고가 우회도로 마련 및 주변 16개 교차로 개선
 - 기본 및 실시설계 : '14. 10~'15. 6월

- 지역주민·일반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의사결정체계 구축
 - 지역주민, 서울시의회, 관련구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100여회 소통
 - 시민위원회 구성·운영 등 시민주도의 열린 의사결정체계 구축·운영
 - 고가산책단 등 시민사회와 민·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·운영

□ 향후계획

- 보행길로의 전환공사
 - 보행길 조성을 위한 교량 바닥 철거공사 발주 : '15. 9월 ~ 10월
 - 철거공사 시행 : '15. 11월 ~ '16. 3월
 - 교량 보수·보강, 조경공사, 부대공사 등 시행 : '16. 3월 ~ '17. 3월
- 북부 역세권 개발 조기 추진
 - '15년 하반기, 코레일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
- 남대문 시장 활성화
 - '남대문 시장 특성화위원회 구성·운영'을 통해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 착수
- 서울역 주변 종합교통개선대책 공사시행 : '15. 7~ 10월



〈당선작품 : Winy Mass(비니마스)의 서울수목원〉

洞주민센터 혁신을 통해 주민중심의洞주민센터 출범 및 복지담당 공무원 대폭 증원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 실현

□ 「찾아가는洞주민센터」 출범 : 찾아가는 복지 실현

○ 추진배경

- 송파세모녀 가정과 같이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위기가정 발굴·지원 필요
- 관 주도 복지행정에 따른 자발적 민간자원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 상존
-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가 미흡

○ 추진방향 :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

- 복지플래너 도입 ⇒ ‘기다리는 복지’에서 ‘찾아가는 복지’로 전환, 복지사각지대 해소
- 복지상담전문관 ⇒ 복지·보건·고용 등 통합정보제공
- 洞 사례관리위원회 ⇒ 신속·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관리
- 주민의 역량 강화와 촘촘한 관계망 형성 ⇒ 마을 일체감 및 복지생태계 조성
- 동주민센터 행정혁신 ⇒ 주민자치 활성화

○ 주요 추진실적('15.6월 현재)

- 선 정 : 총 13개구 80개동을 공모를 통해 평가·선정
 - ▶ 전면 시행 : 4개구 61개동(성동, 성북, 도봉, 금천구)
 - ▶ 일부 시행 : 9개구 19개동(종로, 노원, 은평, 서대문, 마포, 양천, 구로, 동작, 강동구)
- 인력채용 :洞별 평균 7.8명
 - ▶ 운영위원회(3회), 공무원노조(9회),市·區 정책간담회(9회) 등 다양한 의견수렴
 - ▶ 표준업무설계를 통하여 사업을 실행할洞에 대한 적정인력 산출과 배치기준 제시

계	공개경쟁	민간경력채용	일반임기제	인력재배치 등	방문간호사	비고
617	175	189	51	96	106	'15.6.19 현재

- 관계자 교육 :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재양성
 - ▶ 동장리더교육('15.5.12), 기존공무원('15.5.20~) 및 신입공무원('15.6.24~) 교육
 - ▶ 민간리더 교육(통반장, 복지관종사자)('15.5월 중순 ~)
- 공간 재설계 : 항상 열려있는 주민들의 공간으로 조성
 - ▶ 관계자 회의(14회), 구별 MP의 구청장 면담(4회), 사업설명회(1회) 등 의견수렴
 - ▶ 공공건축가 '함께하는 협약' 체결('15.5.12), 실시설계('15.6월초), 시공(~'15.6월말)
- 자치구 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(←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)
 - ▶ '찾아가는 동주민센터' 사업방향을 담은 사업가이드라인 제공(市 → 區, 3.5)
 - ▶ 市 가이드라인 기초하여 자치구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서 제출(區 → 市, 4.10)
 - ▶ 소위원회 구성(4.24), 현장방문(4.24 ~ 5.1) 통해 실행계획서 확정
- 사업실행을 위한 매뉴얼 마련 : 사용자 중심 매뉴얼 제시
 - ▶ 자체 검토회의(10회), 외부기관(복지관 등) 검토회의(3회), 연석회의(1회) 등 의견수렴
- 대시민 홍보 : BI개발 및 응용디자인(안내문, 플래카드 등), 사업동영상 개발 배포 등



YTN뉴스 등 총 42건 보도



영상광고(YTN, 롯데시네마 등, '15.6.1~)

□ 향후일정 : '15. 7. 1부터 1단계 시행

- '15년 7월 : 기자설명회(원순씨 일일복지플래너 체험)
- '15년 8~9월 : '16년 시행 2단계 자치구 선정 예정
- '15년 11~12월 : 1단계 사업 성과평가 실시(2단계 사업에 반영)
- 연차별 확대 : '16년 15개구 → '17년 20개구 → '18년 25개구

IV. 기획조정실 현안사항

1. 지방자치 20년에 따른 지방분권 구현	27
2.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로 법률사각지대 해소	29
3.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상생발전 기반 구축	31
4.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	33
5.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정착	37
6. 투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	39
7.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	41

1 지방자치 20주년에 따른 지방분권 구현

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분권 포럼 개최,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·운영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

□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15.4.2.시행)

□ 추진방향

-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및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, 지방분권과 시민 삶의 제고에 대한 공론화
- 자치조직·재정·입법 등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학계·언론계·시민단체 등과 비전을 공유하고, 중앙정부에 해결방안 마련 촉구

□ 추진내용

- 지방분권 촉진 자문기구인 ‘지방분권협의회’ 구성·운영
 - 구성 :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(2년 임기)
 - ▶ 시민, 시의회, 학계, 시민단체,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
 - 운영 : 매년 1회 이상 개최,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
 - 기능 : 지방분권 촉진·지원 추진계획의 수립, 지방분권과제 추진 등 자문
- 우리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‘지방분권 촉진·지원 추진계획’ 수립
 - 지방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,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
 - ▶ 서울연구원 상생발전·분권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로 수행 중

○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‘지방분권 포럼’ 개최

- 행사명 : (가칭)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지방분권 포럼
- 일시/장소 : '15.9.17.(목)~9.18.(금) / 신청사 다목적홀 및 시립대
- 소요예산 : 100백만원(예산사업명 :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)
- 참석대상 : 약 300명(학계, 정계, 시민 등 지방분권에 관심 있는 자)
- 주요내용(안)

시 간	내 용
09:00~10:00	현장 등록 및 명찰 배부
10:00~11:20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회 행 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회 인사말씀(10') - 축사 및 기조연설(40') - 특별대담 '지방자치 20년을 말하다'(30')
11:20~16:00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발표 및 토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션1 : 자치조직권 확보를 통한 중앙정부-지방 간 상생방안 연구 - 세션2 : 해외의 자치입법권 보장 범위와 한국의 자치입법권 사례 비교 - 세션3 :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 우수사례와 국내 적용방안 연구
16:00~16:30	종합토론 및 폐회행사

향후계획

-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 : '15.6월~9월
-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 : '15.6월~9월
- 지방분권 포럼 개최 : '15.9월

2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로 법률사각지대 해소

'14. 12월 시범 시행한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'찾아가는 동주민센터' 대상 동으로 우선 확대하여 법률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함

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('07. 4. 5)
-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('14. 9. 1)

사업개요

- '15년 하반기,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중심으로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
 - '서울시 마을변호사'를 '찾아가는 동주민센터'의 주요 프로그램에 포함
 - ▶ 찾아가는 복지·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

❖ 찾아가는 동주민센터

- 동행정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중심의 복지체제로 혁신, '15.7.1부터 연차적 시행

- 사업예산 : 249백만원(예산사업명 : 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)

추진경과

- '찾아가는 동주민센터'에 '마을변호사' 포함시행 협의(자치행정과) : '15. 2월
- 마을변호사 확대 시행동 수요 조사(자치구) : '15. 4월
- 마을변호사 추가 공개 모집(200명 자원) : '15. 5. 26 ~ 6. 9

추진내용

- 마을변호사 추진 실적

-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('14. 12월 ~ '15. 5월)

구 분	계	방문상담	전화상담
계	1,185	821	364
월평균	198	138	60

○ 마을변호사 시행대상 확대

- 확대 시행일 : 2015. 7. 1.
- 확대시행 洞 및 마을변호사: 100개동 / 200명(1개동에 2명)
 - ▶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대상(66개동), 자치구 신청(34개동)

❖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차('15.7.1) 시행: 79개동
 - 4개 자치구(모든 동) : 61개동(성동, 성북, 도봉, 금천), 9개 자치구(2개 동) : 18개동
 - 마을변호사 기 시행 13개동을 제외한 66개동에 확대

연번	자치구	'14.12	동 확대	계	연번	자치구	'14.12	동 확대	계
1	종로	2	3	5	15	양천	6	2	8
2	중	3	0	3	16	강서	2	1	3
3	용산	3	2	5	17	구로	7	1	8
4	성동	0	17	17	18	금천	1	9	10
5	광진	0	1	1	19	영등포	6	3	9
6	동대문	0	2	2	20	동작	14	1	15
7	중랑	5	2	7	21	관악	4	2	6
8	성북	4	16	20	22	서초	0	2	2
9	강북	9	2	11	23	강남	2	1	3
10	도봉	5	9	14	24	송파	5	2	7
11	노원	2	5	7	25	강동	0	6	6
12	은평	0	4	4	계		83	100	183
13	서대문	2	3	5	비율		19.6%		43.2%
14	마포	1	4	5					

○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점진적 해소

- 마을변호사 연결로 개업변호사가 없는 법률서비스 취약지역(동) 점진적 해소

구 분	마을변호사 시행 전	'14.12월 (마을변호사 배정)	'15.7월 (마을변호사 확대)
개업 변호사가 없는 동(%)	219(51.8%)	168(39.7%)	114(26.9%)

○ 마을변호사의 주민대상 생활 법률교육 등 다양한 활동 지원

- 생활법률 강좌에 대한 강사료 지원으로 법률교육 활성화 및 분쟁예방 유도

향후계획

○ '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' 단계적 시행에 따른 마을변호사 추가 확대

- '희망 동 수요조사'를 병행하여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
 - ▶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: 13개구('15) → 15개구('16) → 20개구('17) → 25개구('18)

3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상생발전 기반 구축

타 지역과 교류협력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시민체감형 상생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상생발전 기반 구축

□ 추진배경

- 지역 간 자원을 상호 활용 할 수 있는 협력방안 마련 및 관계 구축
- 도농 간 먹거리, 일자리 교류 등 시민체감형 교류협력사업 지속 확대
-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

□ 추진경과

- 지역간 교류협력 현황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 조사 : '12.7~11
- 타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파악, 전국 시·도연구원 공동연구 및 결과 발표
- 지역상생을 위한 민·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: '13.6~
- 도농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('13.6 구성), 집중회의, 유관부서 검토회의 등
- 상생공동체만들기 공유 확산을 위한 워크숍·포럼 등 개최 : '13.5~'14.2
- 민간활동가 관계자 워크숍,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
- 서울-지역간 상생공동체 만들기 지속성 제고방안 연구 : '14.8~'15.2
- 지역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, 상생교류협력 사업모델 개발 등

□ 추진내용

① 상생협력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「우호교류협약 체결」 추진

- 기초지자체와 협약체결로 먹거리·관광 등 주민체감형 교류협력 증대

〈 민선6기 서울시 우호교류협약체결 현황 〉

- 광역(3) : 광주, 제주, 대전
- 기초(10) : 정읍, 포천, 진안, 고창, 함평, 거창, 고령, 철원, 남해, 영월
- ※ 민선5기 협약체결 현황 : 광역3(충남, 전북, 광주), 기초5(완주, 수원, 순천, 금산, 완도)

② 지역 간 상생공동체 실현을 위한 「상생발전 기반」 강화

○ 「지역과 함께, 서로살림」 지역상생포럼 구축

- 구 성 : 자치단체(광역시4, 기초15), 시·도 연구원, 민간활동가
- 운 영 : 정례총회(연 1회), 실무회의(안전별 수시 개최)
- 역 할 : 상생협력사업 발굴·추진 및 우수혁신사례 공유 등 협력기반 구축

〈 2015 지역상생포럼 창립총회 개최 〉

- 행 사 명 : 「지역과 함께, 서로살림」 2015 지역상생포럼
- 일시 / 장소 : 2015. 6.4(목) 11:20~17:00 / 대회의실, 간담회장, 소회의실 등
- 참여지자체 : 19개 자치단체(광역시 4개, 기초 15개)
 - 광역(4) : 서울, 광주, 충남, 전남
 - 기초(15) : 거창, 고령, 고창, 금산, 남해, 수원, 순천, 영월, 완도, 완주, 정읍, 진안, 철원, 포천, 함평
- 주 요 내 용 : 지자체별 상생혁신사례 발표, 민관협력 세미나 등

○ 주요 상생협력 분야

-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농어촌 체험·교류 추진
 - ▶ 도심지 내 정기적 직거래장 마련 및 전통시장 간 상호방문 교류
 - ▶ 지역명소 발굴 협력 및 관광자원 집중 홍보로 지역방문 확대
 - ▶ 어린이·청소년 도농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어촌 체험교류 확대
- 지역 간 유희자원 발굴 및 활용
 - ▶ 지역 폐교 활용을 통한 자연·문화 체험공간 조성 협력
 - ▶ 공공기숙사 공동건립 추진 등으로 지역출신 학생 거주 문제 경감
- 귀농·귀촌, 품앗이 등 도농연계 일자리 마련
 - ▶ 지역 귀농학교 및 마을과 연계한 귀농·귀촌 희망자 안정적 정착 지원
 - ▶ 지역간 일감·일손 교류로 농촌 부족일손 해결 및 도시민 도농일자리 마련
- 지자체 간 지속적 소통협력 체계 구축
 - ▶ 지역 간 정책 우수사례 현장 상호방문 및 인사교류 추진
 - ▶ 타 지역 재해·재난 복구 및 구호 적극 지원

□ 향후계획

- 지역별 상생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 지속 추진
- 지역상생포럼 참여 지자체 제안사업 의견수렴 및 실무진 회의 개최

4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

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'16년도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우리시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※ 비예산사업

□ 추진배경

-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인하여 市 재정부담 증가
 -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,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없는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급증으로 재정운용 경직성 초래('15년 매칭시비 : 3조 3,872억원)
 - 차등적인 지방재정지원제도로 재정 손실 발생
 - ※ '15년 타 시·도와 차등보조에 따른 추가부담액 : 1조 2,651억원
-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해 안전, 경제 활성화, 도시재생, 복지서비스 등 市 역점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

□ 2015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

✓ 불합리한 지원기준 변경 노력,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청으로 '13년~'15년까지 총 1,806억원을 추가 확보

※ ('13년도) 190억원 → ('14년도) 813억원 → ('15년도) 803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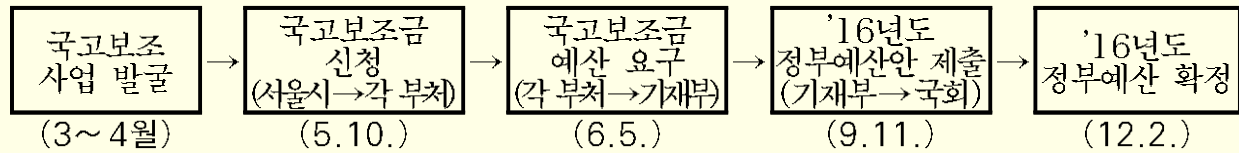
- 사업발굴 단계 :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
 - 최초 사업발굴시 운영비 보조, 노후시설 재투자 등 유지관리 사업보다는 사회적 이슈, 국회의원 관심사업 등 신규 사업 위주로 발굴 필요
 -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근거법령, 지침 개정 등의 제도개선 노력 병행
- 예산반영 활동 : 정부(소관부처, 기재부) 및 국회 설득 논리 개발
 - 민간단체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현장 의견을 활용한 국고보조 필요성 강조

□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전략

체계적 대응을 통한 **적극적인 국고보조금 확보(1,000억원)**로 **市 재정건전성 제고**

- (추진체계 정립) 소관 실·본부·국장 책임 하에 핵심사업 관리 및 해당 정부부처·국회와 협력체계 구축
- (핵심전략사업 선정) 지역 관심사업 중앙부처 연계사업 등 국비확보 가능성이 높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지속 설득

※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추진일정



□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현황

- '16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: 3월
 - 실·본부·국별 71개 신청사업 중 11개 (6조 3,364억원) 핵심사업 선정
- 제332회 국회 임시회 대정부 질의서 전달 : 4월
 - 우리시 국비확보 필요 4개 주요 사업 (9호선 전동차 구매, 도로함몰 예방 등)
-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에 국고보조 제도개선 건의 : 5월
 - 4개 분야 21건 건의 (총괄예산 3건, 사회예산 8건, 경제예산 7건, 행정예산 3건)
- 국고보조금 중앙부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협의사항 제출 : 6월
 - '16년도 국고보조 요청 사업 516개, 5조 1,240억원 신청
 -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지방비 부담 협의사항 18건 제출

□ 향후 추진계획

- 기재부 정부예산안 반영 활동 : 2015.6월 ~ 8월
 - 기재부 방문을 통해 정부예산안 심의내용 수시 협의 및 국고보조 지원 요청
- 국회 방문 활동 및 제도개선 건의 : 2015.9월 ~ 11월

2015 지방재정협의회 주요 건의사항

① 총량·총괄예산분야

(단위 : 억원)

우선 순위	소관부처 (회계)	사업명 (총사업비)	'15년 예산 (국비)	'16년 요구 (국비)	건의사항 및 애로사항
1	기획재정부	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차별개선	-	-	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타 시·도 수준으로 상향 건의
2	교육부	교육청 법정전출 비율 하향조정 및 이중 전출분 제외	-	-	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 비율을 시세의 5%로 하향 조정, 담배소비세 이중전출 개선
3	행정자치부	유류세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(국고보조사업 전환)	-	-	유류세 보조금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

② 사회예산분야

(단위 : 억원)

우선 순위	소관부처 (회계)	사업명 (총사업비)	'15년 예산 (국비)	'16년 요구 (국비)	건의사항 및 애로사항
1	문화재청 (일반회계)	중남토성 복원을 위한 주민 토지보상 조기집행(2조원)	350	2,800	조기 토지보상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요청
2	환경부(국토부) (환경개선특)	도로함몰(싱크홀) 재난예방사업 (1조 855억원)	100	1,954	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노면 하부 동공탐사 국비지원 요청
3	환경부 (환경개선특)	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(총인) 처리시설 설치(2,558억원)	-	55	광역시 수준의 하수처리장 확충 국비지원 요청
4	환경부 (일반회계)	마포자원화수시설 소각로 성능 향상 (388억원)	-	42	자원화수시설 소각로 향상을 위한 총사업비의 30% 국비지원 요청
5	환경부 (일반회계)	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(1,027억원)	-	66	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비의 30% 국비지원 요청
6	보건복지부 (일반회계)	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	12	553	보조금 지급 대상 신설과 국고환원 요청
7	보건복지부 (일반회계)	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설치비 지원	443	701	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·설치비 추가 지원
8	보건복지부 (일반회계)	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	79	60	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속 지원

③ 경제예산분야

(단위 : 억원)

우선 순위	소관부처 (회계)	사업명 (총사업비)	'15년 예산 (국비)	'16년 요구 (국비)	건의사항 및 애로사항
1	국토교통부 (교통시설특)	지하철 9호선 전구간 개통 대비 전동차 구매(1,237억원)	30	271	총사업비에 미 반영된 36량에 대한 40% 국비지원 요청
2	국토교통부 (교통시설특)	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(1조 3,552억원)	-	695	신규 건설시의 지원기준에 따라 40% 국비지원 요청
3	국토교통부 (교통시설특)	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	-	1,680	'16년도 예상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50% 국비지원 요청
4	국토교통부 (광역교통시설특)	동부간선도로(광역도로) 건설비 국고보조 한도 상향(3,850억원)	-	300	광역도로 국고보조 지원한도 상향(1,000 → 1,500억원)
5	국토부(문체부) (일반회계)	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(450억원)	20	82	곤돌라설치, 지하주차장 및 공원조성비 50% 국비지원 요청
6	국토교통부 (주택도시기금)	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기금지원 현실화	826	1,665	실제 주택매입 비용을 반영한 국비지원 요청
7	국토교통부 (주택도시기금)	국민임대 출자 기금지원 현실화	459	541	실제 주택매입 비용을 반영한 국비지원 요청

④ 행정예산분야

(단위 : 억원)

우선 순위	소관부처 (회계)	사업명 (총사업비)	'15년 예산 (국비)	'16년 요구 (국비)	건의사항 및 애로사항
1	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	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	-	-	지방소비세 추가 5% 인상 (11 → 16%) 요청
2	행정자치부	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및 교부대상 개선	-	-	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개선 및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으로 전환
3	국민안전처 (일반회계)	노후 소방헬기 교체 (270억원)	-	35	노후 소방헬기 교체를 위한 국비 50% 지원 요청

5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정착

'15년 제안사업 신청접수,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, 심사·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

□ 추진근거 및 배경

- 지방재정법 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46조
-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(2012.5.22. 제정)

□ 사업개요

- 제안사업 : 市 전체공통사업·區 지역사업
- 제안방법 : 시민 직접제안(인터넷, 우편, 방문)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: 총 250명(남·여, 연령, 지역 고려)
 - － 분과위 운영 : 경제산업, 환경, 공원, 여성보육, 보건복지, 건설, 도시교통, 문화체육
- 주요내용
 - － 매년 500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을 참여예산위원회 및 전체시민이 선정
 - － 市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제시 및 의견서 제출(참여예산위원회 → 시의회)
- 소요예산 : 439백만원(예산사업명 : 주민참여예산제 운영)
 - － 예산학교 운영·한마당 총회 등(348백만원), 모바일시스템 구축(91백만원)

□ 추진경과

- '1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: '15. 2. 17.
-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(976명 접수) : '15. 2.17.~ 3.6.
- '15년 예산학교 운영 : '15. 3.16. ~ 4. 1.
- '16년 참여예산사업 사업주제 공모 : '15. 3.14.~ 3.27.
- '16년 참여예산사업 제안사업 신청접수 : '15. 4. 1.~ 5. 6.
- 區 지역사업 제출(자치구 → 市 위원회) : '15. 6. 24.

□ 주요 추진내용

○ 2016 제안사업 접수결과 : 총 3,587건, 4,453억원

－ 市 전체공동사업 : 2,740건, 4,015억원

(단위 : 억원)

구분	계	건 설	경제산업	공 원	교통주택	문화체육	보건복지	여성보육	한 경
건 수	2,740	338	374	365	282	313	496	262	310
금 액	4,015	656	756	799	371	395	458	201	379

※ 지난 3년간 접수현황 : '15년 1,533건 7,560억원, '14년 1,460건 1조 3,017억원, '13년 402건 1,989억원

－ 區 지역사업 : 847건, 438억원

○ 사업내용 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: 실·본부·국 사업소관부서, 자치구

－ 관련법령 등 검토 및 제안내용에 대한 사업계획 구체화

○ 2015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사항 모니터링 실시 : 352개 500억원

－ 사업추진방침, 추진실적, 사업비 집행현황 등 자료 분석 ⇒ 서면평가실시

○ 2016 예산배분 우선분야 시민설문조사 실시 : 3개 분야, 40개 부문

□ 향후계획

○ 분과위 심사(현장심사 등 사전심사, 본 심사) : '15. 6.17. ~ 6.30.

○ '15년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: '15. 5월 ~ 10월

○ 전자투표 실시(엠보팅) : '15. 7. 16. ~ 7. 25.

○ 2015 한마당 총회 개최(장충체육관) : '15. 7. 24. ~ 7. 25.

－ 사업선정 투표, 제도공유 세미나, 우수사업 발표, 토크쇼, 연극 등 문화공연

6 투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

투자·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, 책임경영 강화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

□ 추진근거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(경영평가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투자기관 및 출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 등
- 평가대상 : 투자기관(5개), 출자·출연기관(13개)의 '14년도 경영실적
- 평가기간 : '15.4. ~ 7월(4개월간)
- 소요예산 : 140백만원 (예산사업명 :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)
- 평가내용

구분	투자기관(5개)		출자·출연기관(13개)
평가구분	〈 경영평가 〉		〈 경영평가 〉
평가주체	행정자치부 (지방공기업평가원)	서울특별시 (한국능률협회컨설팅)	서울특별시 (한국능률협회컨설팅)
평가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리더십/전략(11%) 경영시스템 (30%) 경영성과 (49%) 정책 준수 (1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성과 (35%) 재무성과(15~20%) 사업성과(45~5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통지표(3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책임경영, 효율경영 등 사업지표(7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관별 특성 반영
결과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개선 성과급 지급범위 결정 (5개 등급) 기관장평가 반영(3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행자부 지급범위내 지급률결정(0~300%) 기관장평가 반영(7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개선 성과급 차등지급 (4개 등급, 0~300%) 대표평가에 반영(70%)

□ '15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내용

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

- 지표단순화(유사지표 재분류), 단순 채무 중심에서 부채관리로 지표 전환
- 안전관리·서비스 질 향상 등 지표 신설

출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

- 사업지표 비중 확대 : 50 → 70%
- 재정성과지표 다양화 및 구체화
 - 사업수행 효율성, 계량관리 업무비 등 평가항목 세분화
- ※ 서울의료원 경영실적평가 개선
 - ⇒ 공통지표만 평가하고 사업지표는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평가결과로 대체

□ 추진실적

- '15년 투자, 출연(출자)기관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: '15.1.29.
- '15년 투자, 출연(출자)기관 경영평가 실시 : '15.4월~7월
- '16년 투자, 출연(출자)기관 평가지표 보완 및 개선 : '15.4월~7월
 - 신규 평가대상 기관(평생교육진흥원) 사업지표 개발 포함

□ 향후계획

- '16년 투자, 출연(출자)기관 평가지표 확정 : '15.7월중
- '15년 경영평가 최종보고회 개최 : '15.8월초
- '15년 출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통보(시→행자부) : '15.8월중

7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

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의 전문적·효율적 추진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 추진

□ 추진근거

- 「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8조 및 제21조
-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추진계획('14.8.27)

□ 전담조직의 필요성

- 개도국 공유요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수출의 사업화를 위한 체계 구축 필요
- 아시아 리딩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제고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증대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□ 추진경과

- 전담기구 설립검토 TF 운영 및 국내외 정책진출 사례분석·관계자 면담('14.2~8월)
-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연구용역 시행('14.11월~15.3월)
- 용역결과 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 사업부 형태 설치 추진('15.4월~)

SH공사 사업부제 적용 타당성(용역결과)

- ◆ 시 재정부담 완화와 조직 초기단계 사업성과 가시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필요
 - 사업초기 적자발생 부담 완화를 위해 4~5년까지 기존 조직 활용
- ◆ 도시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해외진출 업무와 SH공사 간 높은 기능적 연계성
 - 스마트시티 등 SH공사의 도시인프라 노하우와 우리시 우수정책 연계 용이

□ 전담조직 개요

- 명 칭 : (가칭)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
- 설치방법 : SH공사 내 해외사업 전담조직 신설
- 운영방법 : 서울시 정책수출 사업 위탁운영
- 조직형태 : SH공사 사장직속 1단 2팀
 - 사업기획팀 : 사업발굴, 정책상품 현지화, 사업기획, 자금조달 계획수립 등
 - 해외사업팀 : 시장분석, 컨설팅, 진출 전략수립, 사업실행 등
- 인력구성 : 총 10명(기존 인력 4, 전문가 채용 4, 파견직원 2)
 - SH공사 인력활용 : 도시계획, 재무금융, 사업성 분석, 일반행정
 - 전문가 신규 채용 : 분야별 해외사업 경력자, 지역전문가 등
 - 서울시 공무원 파견 : 교통, 상수도 분야(필요에 따라 분야 변경)
- 소요예산 : 300백만원 (예산사업명 :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·운영)

□ 향후계획

-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조직설치 준비 : '15. 6월
 - SH공사내 사업단(임시조직) 설치, 해외사업 관련 SH공사 규정 정비 및 인력채용 준비
 - ※ 사무실 조성, 이사회 정원승인 및 임시추진반 직원발령 완료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: '15. 7월
-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조직출범 : '15. 9월
 - 직원채용 및 인사발령, 사업 위탁계약 체결

〈 해외진출 성과 〉

- ◇ '12년부터 경쟁력이 있고 공유요청이 많은 4대 선도분야(교통, 상수도, 전자정부, 도시철도)를 중심으로 21개국, 24개 도시, 27개 사업 진출
 - 상수도, 전자정부 분야는 개도국 중심 ODA 형태 진출(11개 사업)
 - 교통, 도시철도 분야는 민간기업 수주형태 진출(16개 사업)